

## 정치 현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유형과 심리적 기제\*

김도환† 황상민 최윤식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각종 정치적 주제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 유형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사건이나 입장을 반영하는 86개 문항을 선정한 후, 이를 49명의 조사대상자에게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인식은 크게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3개 집단은 각각 공공 사회 대 사회적 사회(집단 1), 공정 사회 대 안티 사회(집단 2), 공약 사회 대 이념 사회(집단 3)였으며, 각 유형들이 지닌 구체적인 심리 특성과 관계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도출된 3개 집단의 성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하여, 수도권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1이 49.8%, 집단 2가 34.4%, 집단 3이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집단은 이념 성향, 지지하는 정당, 이전 선거에서의 투표 행태, 향후 투표 의사,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심리적으로 구분된 정치 인식 유형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심리학적으로 정치 현상을 탐색하고 그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학문적인 유용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주요어: 정치 심리, 정치 인식 유형, 정치 행동, 주관성

\* 본 논문에 대한 1차 심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지적은 “경험적 발견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였다. 본 연구가 수행된 시점은 2009년 8~9월이었고, 연구 결과 이명박 정부는 공정 사회를 지향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에게 과학적 연구의 타당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Journal of Child Development』의 새천년 특집호에 실린 논문(Fabes, Martin, Hanish, & Updegraff, 2000)에서 저자들은 심리학자들이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생태학적 타당도에 덧붙여 이제 새로운 기준들(new criteria)이 필요하다면서, ① 발생 타당도(incidence validity: 특정 연구가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가의 정도), ② 영향 타당도(impact validity: 연구 토픽으로 말미암아 개인들에게 상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도), ③ 공감 타당도(sympathetic validity: 연구의 결과가 그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의 문제), ④ 주목 타당도(salience validity: 특정한 연구 토픽이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public awareness)의 문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자외적 해석”이 일정한 ‘공감’과 ‘발생’을 충족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교신저자 : 김도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겸임교수,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전화: (02) 820-5124  
E-mail: kimin67@chol.com

## 서론

국가별 사회갈등 정도를 비교한 연구(삼성경제연구소,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국가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환경, 교육, 경제, 성, 이념, 세대, 정치 8개 갈등 영역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50% 이상이 8개 영역 모두 ‘심각하다’고 응답(이병량, 김서용, 전영평, 2008)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은 상당히 극심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중에서도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81.1%), 경제적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갈등(77.5%)에 대해 국민들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렇듯 사회 갈등이 심각해진 원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1%가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을 지목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매우 다양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현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각종 갈등이 유발되고 격화되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가? 물론 이러한 문제는 사람의 마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심리적 맥락이 이러한 갈등 이면에서 작동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인식의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정치사회적 갈등은 결국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화되는데, 흥미롭게도 50% 이상의 유권자들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한겨레 21, 2009). 한국인에게 정치는 이중적이다. 사람들은 무수한 정치적 사건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일상을 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정치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동시에 “정치적 무관심이 민주주의에 위기를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해결되어야 하는 갈등들은 산적해 있는데, 기존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는 50%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이 가진 마음의 지도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갈등과 정치 불신은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들에서 시작한다. 한국 사회에서 각종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주제들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인식은 실제 사회적 사건이나 갈등 상황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러한 정치 사회적 판단은 이성 뿐만 아니라 감성의 문제(Westen, 2007)이기 때문에, 정치학이나 사회학 못지않게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정치적 주제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우선 한국인이 ‘정치적 주제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정치, 사회, 갈등의 다양한 장면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의 많은 부분은 정치에 대한 ‘마음의 지도’, ‘인식 틀(schema or paradigm)’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마음의 지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진개를 설명할 수 없으며, 당연히 갈등 해결을 위한 변화 모색 역시 무효할 것이다.

한국인의 정치에 대한 태도나 갈등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분류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구분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마음의 지도는 기존의 진보 대 보수의 이분법과는 다른 성격의 접근이다. 왜냐하면, 심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진보 대 보수의 틀로써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정치 현상을 의미 있게 담아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동질적이거나 공유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학적 구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심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 있다.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성(construct)을 탐색하는 목적은 자신의 관점이 여러 가지 신화들 중에서 하나임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며, 그러한 현상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좀 더 나아지는데 가장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

## 이론적 배경

### 정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아직까지 한국 심리학계에서 정치는 상당히 낮은 연구주제이지만, 정치는 심리다. 흔히 신문지상이나 방송 뉴스, 사회과학 서적에서 접할 수 있는 ‘민주화의 의지, 유교적 문화전통, 국민적 공감대, 투표행위, 테러의 위협’ 등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무수한 어휘들의 한 부분에는 ‘마음’의 요소가 숨어있다(이정희, 2005).

정치 현상(문화)은 정치 체계의 집합체로서의 역사와 그 속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개인의 경험과의 쌍방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치체계의 거시적인 역사적, 사회학적 분석과 개인의 정치행동의 미시적 심리학적 분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백상건, 1992). Pye(1991)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 신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이 정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한 사회의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도, 신념 등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 서구에서는 정치 후보자들에 대한 인상 형성, 정치적 신념, 감정, 정보 처리,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한 기억 등과 같은 정치적 인지 분야(Kuklinski, Lusk, & Bolland, 1991), 투표 효능감, 선거 관심, 투표 의사, 주변 사람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인지 등 정치심리학과 설득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고, 이들의 연구가 정치인들과 정부에 의해 심분 활용되고 있다(Kinder & Sears, 1985).

일반적으로 정치심리학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심, 정치 지식, 정치에 대한 신뢰, 정당 충성도를 정치 행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았다(Verba, Scholzman, & Brady, 1995). Helgeson, 김효창, 김의철(1995)은 민주주의, 정치사회화, 정치적 리더십, 정당, 남북 통일에 관한 한국인의 태도와 신념을 조사한 바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김의철(2002)은 토착심리학적 입장에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국인의 독특한 사회적 표상을 탐색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존중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양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은 투표권, 참정권, 언론의 자유, 정부 비판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였다. 또한 화목한 가정생활, 원만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를 옹호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고, 정치 집단이나 정부 기관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정치 참여나 정치 효능감의 수준이 낮았고, 정치적 소외의 정도가 높았다.

투표행태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은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점으로 부정부패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대통령의 자질로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는 청렴결백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또한 안신호(2000)는 우리나라 투표에서 작동하는 연고주의의 양상과 심리적 원인에 대해 개괄한 바 있다.

정치심리학 연구는 특정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데, 심지어 미국 상원의원들의 정책 담화문들을 분석한 결과, 보수적인 의원들이 진보적이거나 중간 정도의 의원들에 비하여 정책 이슈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다 단순한 평가 규칙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Tetlock, 1984). 선거를 앞둔 TV 토론의 심리학적 효과를 연구한 나은영, 한규석, 고재홍(2003)의 연구에 따르면, TV 토론 후 대체로 원래 지지 후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TV 토론은 양대 후보 사이의 이미지의 차이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켰다.

정치심리학적 연구가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진단하는 지점이다. 이 때 정치인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그 정치인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상, 즉 공개적으로 지각된 후보의 속성”이라고 정의된다(권혁남, 2002). 황상민과 김도환(2003a)은 200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심리학자 입장에서 분석하면서, 투표 행위에서 중요한 점은 후보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그 후보에 대해 어떤

표 1. 변인 중심적 접근과 사람 중심적 접근의 비교 (Gjerde, 2001)

변인 중심적 접근	사람 중심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개념의 차원에 따라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정렬시킨다.</li> <li>▷ 연구되는 특성의 집합(aggregate of traits)으로 개인을 본다.</li> <li>▷ 표본에 걸쳐 나타나는 변인 간 관계에 연구의 초점이 있다.</li> <li>▷ 성격 차원의 기본 범주를 확인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을 조직화된 전체(organized whole)로서 본다.</li> <li>▷ 발달심리학의 연구 변인들은 따로따로 고립된 상태로 연구될 수 없다.</li> <li>▷ 사람 그 자체의 발달에 초점이 있다.</li> <li>▷ 비슷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li> </ul>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미지는 바로 유권자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핵심은 후보자 개인의 실체가 아니라, 지지자들의 마음이 된다.

Caprara와 Zimvardo(2004)는 정치적 선택 과정에 유권자의 개인적 특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Big 5 성격검사를 통해 밝혔다. 그들에 따르면, 5가지 성격 요인 중에서, 후보자에게서 지각되는 외향성과 친절성이 유권자들에게 비교적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3가지 성격 요인에는 유권자들이 비교적 주의를 덜 기울인다고 한다. 또한 유권자들은 자기와 성격 특성이 비슷한 사람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수적인 사람은 외향성과 성실성이 비교적 높고 진보적인 사람은 친절성과 개방성이 비교적 높다고 한다. 또한 Jost, Glaser, Kruglanski와 Sulloway(2003)은 메타 분석을 통해, 정치적 태도나 신념이 강한 동기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내리며, 정치적 보수주의가 죽음에 대한 불안, 불안정성, 개방성, 두려움, 자기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변수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정치심리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민해 볼 문제가 몇 가지 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같은 투표 행위에서부터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심리가 정치 현상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정치심리학은 그야말로 일천하다는 표현 외에는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발전이 더디다(이상신, 2009)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심리학회에서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논문들 중에서, 정치, 선거, 투표 등과 관련된 연구는 총 20여 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조차 탐색적인 연구, 집단간 차이검증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기존 연구들이 현상에 대해 변인 중심으로만 접근했다는 점이다. 특정 변인 중심의 연구에 대한 보완적 시각으로서,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각 개인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는 많지 않아 보인다. 표 1은 변인-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과 사람-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을 비교한 것이다. 변인-중심적 접근은 현상에 대해 진단하고 이론적 구조를 체계화하는데 상대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람-중심적 접근은 현실 속에서 그 변인이 작동하는 양상을 이해하고 변화를 위해 개입하는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2가지 접근 방식을 적절하게 병용할 수 있다면, 변인 혹은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상에 대해 풍부하고 종합적인 안목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변인-중심적 접근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인들이 정치 현상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패턴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유형화가 가지는 심리적 의미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정치적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갈등

정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은 평소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한 인식 차이가 구체적으로 부딪치는 장면은 정치사회적 갈등의 맥락이다. 물론 대통령 선거와 같은 투표 장면 역시 입장의 차이가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순간이다. 본 연구에서 정치적 인식의 문제

를 다루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 이해관계의 양립 가능성, 실제와 인식 간의 차이, 세계관 및 행위 양식의 불일치 등으로 구성되며(서문기, 2004), 분석적 차원에서는 인지(cognition), 정서(emotion), 행위(behavior) 차원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은 다시 주관적 및 객관적 상황이 연계되면서 갈등의 복잡성을 더해 가는데,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지, 정서, 행위 차원이 정치 지도자에서 일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Mueller, 1997).

한 사회의 갈등 수준은 소득 불평등, 인종 다양성 등 구조적 갈등 요인과 갈등관리시스템의 효과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즉, 구조적 갈등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으로 구성된 갈등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사회 갈등은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갈등과 정치적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이 매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안 역시 대체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준이다(이병량, 김서용, 전영평, 2008). 이러한 사회 갈등은 단순히 정책적 대안 간의 사회적 선호의 차이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에(김갑식, 2007), 구체적인 정치적 주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갈등은 계층, 이념, 지역, 노사, 세대 갈등으로 사회의 거의 전 분야에 심각한 정도로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서문기, 2004).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 갈등 분야인 계층 차원에서는 빈부 격차와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 불평등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소득 및 자산 분배의 심각한 편중과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괴리감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배층에

대한 불신감으로 연결되어 집단 단절에 의한 해결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서문기, 2001).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불거졌던 '강부자 내각'(강남에 사는 부자들로만 이루어진 개각 인사)에 대한 반발과 같은 현상은 계층 갈등의 좋은 예이다.

또한 한국 정치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갈등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역 연구주위에 근거한 지역 대결주의로 표출되고 있으며, 지역주의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사회연결망의 형성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영호남 지역주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한국 정치 지형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노병만, 1998).

2002년 월드컵과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세대 갈등은 공통된 경험 세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부문으로서, 기성세대가 사회정치적 권위와 특혜를 지나치게 독점하는데 대한 반발로서, 신세대의 상대적 좌절감이 심화됨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송호근, 2003). 하지만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인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황상민과 김도환(2004)은 '심리적 세대 모형'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심리적 세대를 일종의 라이프스타일로 개념화한 후에, 2003년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탐색한 바 있다. 연구를 통해, 12가지 심리적 가치 기준들의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에는 현실주의적 동조형(33.4%), 물질주의적 신봉건형(23.2%), 개인주의적 보보스형(16.8%), 공동체적 개방형(14.0%), 전통주의적 보수형(12.6%)과 같은, 5가지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있었다. 이 연구는 라이프스타일 연구에 개인이 지닌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했다는 점과,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다양한 현실적 갈등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상과 같은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제시, 투명한 절차 보장, 갈등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여러 가지 시도들이 제안된 바 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처방하지

표 2. 주요 사회갈등의 해결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정부	시민사회	시장
지역 갈등	지역간 사회정치적 통합 지역간 산업불균형 해소	갈등해결형 시민운동 활성화 지역간 문화교류사업 확대	지방경제의 활성화
계층 갈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사회불평등에 대한 의견수렴 더불어 사는 문화 형성	정당한 부의 축적 이해 기업의 사회안전망 기여

않는다면 정책적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서문기(2004)는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과정이며, 특정한 갈등 현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끝으로 갈등의 당사자가 갈등 해결의 의지를 갖지 못할 때 양쪽 모두 양보를 거부하고 과격적 결말로 치닫는 ‘치킨 게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갈등 해소와 효과적인 갈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도 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현재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학습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과제다(김기정, 2006). 그런데 갈등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협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갈등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이 유발되거나 격화되는데 작동한 심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지점을 알고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지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핵심 특성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다면 변화를 위한 개입은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지도는 Hinich와 Munger(1994)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들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유권자 개개인 이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활용하

는 ‘효율화 장치(economizing device)’이다. 이는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대한 가치관이며, 개인의 경험과 이익, 지식, 판단, 평가, 정치문화, 정치역사, 정치적 연대, 정당체제 등 정치적 사고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 Q 방법론과 상호주관성 연구방법론

방법론은 방법론 이상이다. 왜냐하면 방법론이란 내용의 규칙, 원리,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이며, 이는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 어떤 내용이 수용가능한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황상민, 김도환, 2003b). Overton(1998)에 따르면, 지난 20세기 지성사를 지배했던 근대성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절대 확실하고, 인간 정신과 독립적이며, 객관적 지식은 가능하다, ② 이러한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탐구의 영역을 상호배타적인 범주들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는 결국 실패했다고 결론내린 후에, 그는 대안적으로 ① 이분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범주들을 관계적 범주들로 대체하고, ② 이러한 관계적 범주들은 서로 상대방과의 관계 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③ 보는 관점(point of view)에 따라 범주는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석(interpretation)과 관점(perspectiv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심리학의 방법론에 대한 반성이나 제안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김정운, 한성열, 1998).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적 방법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Q 방법론(Stephenson, 1953)이다. Q 방법론은 가설 검증보다 가설의 발견에 초점을 두는 가설 생성의 논리로서, Stephenson이 기존 R 방법론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제안한 방법론이다.

Q 방법론의 특징으로는 첫째, 자연 현상에는 가치의 구조가 개입되지 않지만, 사회 안의 인간은 특수한 의미와 적합성의 구조를 가지므로,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하여서는 인간의 본질과 사회현상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Q 방법론은 응답자 스스로가 자극들(대개는 진술문)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함으로써 이를 모형화하고 결국 응답자 자신의 주관성을 스스로 표현해 가는 것이다. 둘째, 논리실증주의에서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이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다시 말해 이미 구성된(pre-constituted) 것으로 간주하지만, 사회적 현실은 의미적으로 구성되어지기(constructed) 때문에 의미의 해석을 통한 이해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Q 방법론은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이며, 연구자의 가정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김홍규, 2003).

황상민(2005)은 Q 방법론을 사용한 '마음의 지도' 기법을 통해, 이런 이론적 입장을 현직 대통령과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8명의 후보자들에 적용한 바 있다. 결과는 어떤 후보도 단일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때로는 특정 개인이 가진 2개 이상의 이미지가 서로 모순되기도 하며, 그러한 마음의 지도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그 후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심리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황상민과 김도환(2006)은 Q 방법론을 대기업 임원들의 리더십에 적용하여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① Q 유형(마음의 지도, 프레임)을 통해 도출된 이미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Farr & Moscovici, 1984; Moscovici, 2000)이라는 것, ②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미지, 인식)은 소위 실체와 대비되는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구성된 실체'라는 점, ③ Q 방법론의 해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너무 많이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은, 현상 속에는 이미 모형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bound) 있다는 점(Gibson, 1979)을 확인할 수 있다.

##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주요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주제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치적 인식이나 입장은 지고지순한 가치나 명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와 맥락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각종 정치적 주제들에 대한 반응으로 분명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거나, 향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의 주제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을 기준으로 정치적 인식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주요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주제들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지도를 구성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현실적인 정치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연구 1: 정치에 대한 인식 유형 탐색

### 연구방법

#### Q 표본의 구성

Q 표본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주제에 대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문항들은 지난 노무현 정부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한 각종 국정 과제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 사회적 이슈, 문헌 조사, 언론에 나타난 정치 관련 주제와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출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먼저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각종 이슈들(예를 들어 촛불 시위, 국회 폭력, 한미 FTA, 대운하, 감세 정책, 계파 정치, 용산 철거 사태, 사교육 문제, 노무현 비리 수사, 청년 실업과 실직 등)을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언론이나 국정과제 등에서 제시하고



표 3. 요인별 요인고유치(eigen value)와 총 변량 비율 (N=49)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고유치	24.27	2.50	1.34
총변량비율 (%)	49.54	5.09	2.73
누적변량비율 (%)	49.54	54.63	57.36

안 된다, 이러면 정말 싫다'라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카드를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는 '중간 정도 동의하거나, 판단하기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문항을 놓으시면 됩니다.

#### Q 자료의 분석과 해석

수집된 Q 자료는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한 요인분석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조사에 참가한 일반인을 포함하여, 심리학 교수 1명, 심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3명, 정치 관계자 4명 등 총 13명이 참가한 Q 워크숍을 통해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 연구 결과

#### Q 유형의 구조

49명의 Q 반응 자료에 대해 변량 극대화(varimax)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3요인 구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요인은 전체 변량의 57.36%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1 요인이 49.54%, 2 요인이 5.09%, 3 요인이 2.73% 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49명 가운데 1 요인에 속하는 사람은 35명, 2 요인은 10명, 3 요인은 4명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치 현상에 대한 인식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을 의미한다.

#### 정치 인식 유형의 추출

Q 방법론을 사용한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추출된 요인구조에 근거하여 각 요인을 전형적으로 잘 나타내는 상위 문항과 반대의 속성(부적 전형성)을 가진 하위 문항의 내용을 조합하여 각 요인별 특성을 해석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 인식 유형 3개 요인에 대해 상위문항과 하위문항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지 않고,

각 요인의 서로 다른 2개 하위 유형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마치 자연의 속성을 음, 양으로 구분하지만, 실제로 음과 양은 하나의 자연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황상민, 이상원, 김지연, 김리진, 2006). 이는 앞서 "범주들은 서로 상대방과의 관계 하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Overton(1998)의 언급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Q 방법론의 요인분석은 요인 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이 다른 요인에 해당되기도 한다. 즉 하나의 문항이 2-3개의 요인에서 중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 문항들이 어떤 요인에 할당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각각의 문항들이 다른 문항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해석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는 3요인 구조의 6개 정치 인식 유형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문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 정치 인식 유형별 특성

워크숍을 통해, 각 유형별로 추출된 대표적인 진술문(Q 문항)을 바탕으로 각 유형을 구분짓는 특성과 가치, 그리고 해당 문항을 바탕으로 하여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표현되고 인식되는 정치 현상의 인식 유형을 분석하였다. 각 유형의 이름은 유형별 이미지를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명명되었는데, 각각 ① 공공 사회, ② 사적 사회, ③ 공정 사회, ④ 안티 사회, ⑤ 공약 사회, ⑥ 이념 사회였다.

##### 1 유형: 공공 사회형

1유형의 이미지는 소위 일류국가, 선진국 그 자체였다. 사회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고 공적(公的)으로 작동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사회는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사회를 만들거나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표 4. 정치 인식 유형별 대표문항

		각 유형별 대표문항
요인 1	상위 문항	05.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린다. 11. 공적인 일처리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26.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여 정치가 제대로 된다. 71.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 41.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하기로 한 일은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하위 문항	14. 유력 방송이나 신문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만들어진다. 31.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62.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데 인색하다. 52. 우리 사회에서, 학연이나 지연 등이 일의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49.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법을 안 지키다.
요인 2	상위 문항	68. 공무원도 정년보장 없이 해고할 수 있다. 74. 법원, 검찰 등 사법부가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23. 공무원 비리는 민간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 16.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자/부자에 대해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29. 당의 입장이나 결정과 다르더라도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힌다.
	하위 문항	76.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다. 84. 영남, 호남 등 지역 중심의 정치 구도가 여전히 유지된다. 47. 교육부는 교육 문제 해결 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집단이다. 31.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49.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법을 안 지키다.
요인 3	상위 문항	65. 중소기업을 살려야 경제 발전 효과가 있다. 18.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팬클럽은 정당이 새로 생기면 지지할 용의가 있다. 75.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홍보를 강화한다. 48.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슈퍼마켓 진출을 규제한다. 54. 성매매 방지법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단속하고 시행한다.
	하위 문항	64.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이 방송 발전을 위해 좋다. 36. 용산 참사나 재개발 문제의 희생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9.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똑같은 만큼 응징한다. 58. 홍수 피해 방지와 수자원 개발을 위해, "4대강 살리기"는 잘하는 일이다. 71.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다.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회의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고,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이 사회에서 정치란 일상에서 참여하는 활동이며, 삶의 의미가 스스로 찾아서 구현되고, 사교육도 필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다소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며, 재미가 없어서, 감정적으로 끌리는 측면은 약하다.

마치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 선진국의 모습이 연상되는데,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동경하지만, 직접적으로 자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2 유형: 사적 사회

2유형의 이미지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고, 상중하 계층 구분이 뚜렷한 사회이다. 또한 기존 기득권층이 잘 사는데 유리한 사회인데, 오히려 기득권층

표 5. 1유형에 해당하는 대표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전형성점수

		대표문항	평균	표준 편차	전형성 점수
요인 1	상위 문항	05.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린다.	11.83	1.72	2.34
		11. 공적인 일처리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10.86	1.68	1.89
		26.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여 정치가 제대로 된다.	10.80	1.66	1.85
		71.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	10.80	1.89	1.83
		41.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하기로 한 일은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10.71	1.18	1.64
		33.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있다.	10.29	1.32	1.48
		29. 당의 입장이나 결정과 다르더라도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힌다.	10.23	1.31	1.53
		74. 법원, 검찰 등 사법부가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9.94	2.10	1.52
		22.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9.94	2.27	1.17
		23. 공무원 비리는 민간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	9.69	1.66	1.27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학습된 무기력 같은 심리이기에, 자발적으로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느끼는 동안은 큰 탈 없이 유지될 수도 있고, 이 사회의 실상을 잘 모르는 외국에서 볼 때는 잘 나가는 사회라고 볼 수도 있다.

취미 동아리 모임은 활발하지만, 거대 담론이나 집단 활동은 없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로 묶기 쉽지 않다.

각자 개인적인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3 유형: 공정 사회

3유형의 사회는 규칙과 규범의 명확성이 중요해 보인다. 처벌, 평가,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사회이며, 정치적 리더의 역할은 마치 심판과 같다.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올바르지만, 때로는 억압적이라는 반응도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회에서는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인간적 느낌은 별로 없고, 엄한 선생님 같다. 하지만 그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평가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패자부활전이나 사회 유동성이 존재하기에,

표 6. 2유형에 해당하는 대표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전형성점수

		대표문항	평균	표준 편차	전형성 점수
요인 1	하위 문항	14. 유력 방송이나 신문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만들어진다.	3.09	1.74	-1.84
		31.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3.23	2.31	-1.89
		62.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데 인색하다.	3.60	1.58	-1.58
		52. 우리 사회에서, 학연이나 지연 등이 일의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3.63	1.94	-1.52
		49.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법을 안 지킨다.	3.66	1.26	-1.53
		84. 영남, 호남 등 지역 중심의 정치 구도가 여전히 유지된다.	3.69	1.55	-1.60
		64.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이 방송 발전을 위해 좋다.	3.69	1.37	-1.50
		36. 용산 참사나 재개발 문제의 희생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3.80	1.97	-1.53
		01. 대기업은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3.86	1.61	-1.58
		51.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4.06	1.85	-1.37

표 7. 3유형에 해당하는 대표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전형성점수

		대표문항	평균	표준 편차	전형성 점수
요인 2 상위 문항		68. 공무원도 정년보장 없이 해고할 수 있다.	10.20	1.93	1.60
		74. 법원, 검찰 등 사법부가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10.20	1.87	1.80
		23. 공무원 비리는 민간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	10.20	2.25	1.53
		16.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자/부자에 대해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9.50	2.32	1.56
		29. 당의 입장이나 결정과 다르더라도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힌다.	9.50	1.96	1.20
		41.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하기로 한 일은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9.40	2.07	1.37
		25. 사형제를 유지해서 흉악범은 분명히 처벌한다.	9.30	2.26	1.47
		05.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린다.	9.30	2.98	1.09
		12.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9.20	3.36	1.54
		11. 공적인 일처리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9.20	1.69	1.16

개인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여전히 경쟁이 존재한다.

공평이 아닌, 공정하게 움직이는 사회이며, 성악설에 기반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법치 국가, 정의 사회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사회의 모습을 좋다고 느끼지 아니면 너무 엄격하고 딱딱하다고 느끼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광요 수상 시절의 싱가폴 느낌이다.

#### 4 유형: 안티 사회

4유형의 사회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구분이 분명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멋대로, 중구난방의 사회 불만 세력 같다. 사회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분명한데, 이는 한국

인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등 지향적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송호근(2006)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정치는 지역구도에 의해 움직이고, 경제는 대기업의 특혜가 당연시되고, 정치인들은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교육 문제나 환경 문제 역시 기득권의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메인글보다는 댓글 수준의 느낌이 든다. 단지일보가 내세우는 단지 분위기다. 문제해결능력 없는데,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뭐든지 한방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내심 기득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나 주류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고, 미성숙하고 피상적인 사고 수준이다.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인터넷 다음의 아고

표 8. 4유형에 해당하는 대표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전형성점수

		대표문항	평균	표준 편차	전형성 점수
요인 2 하위 문항		76.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다.	2.90	1.97	-2.28
		84. 영남, 호남 등 지역 중심의 정치 구도가 여전히 유지된다.	3.40	1.78	-1.99
		47. 교육부는 교육 문제 해결 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집단이다.	3.60	1.96	-1.78
		31.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3.80	3.22	-1.92
		49.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법을 안 지킨다.	3.80	1.93	-1.74
		82. 환경운동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이익단체 활동이다.	4.10	1.79	-1.54
		81.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우리에게 큰 위협은 없다.	4.30	2.21	-1.45
		09.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수준보다 뒤떨어진다.	4.30	2.71	-1.50
		01. 대기업은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4.50	2.17	-1.30
		14. 유력 방송이나 신문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만들어진다.	4.70	2.36	-1.22

표 9. 5유형에 해당하는 대표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전형성점수

대표문항	평균	표준 편차	전형성 점수
65. 중소기업을 살려야 경제 발전 효과가 있다.	10.50	1.29	2.08
18.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괜찮은 정당이 새로 생기면 지지할 용의가 있다.	10.00	2.45	2.08
75.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홍보를 강화한다.	9.75	2.22	1.71
48.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슈퍼마켓 진출을 규제한다.	9.75	1.89	1.50
요인 상위 3 문항 54. 성매매 방지법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단속하고 시행한다.	9.50	2.08	1.34
43. 독도 분쟁이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게 보다 강력하게 대처한다.	9.50	3.32	1.25
26.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여 정치가 제대로 된다.	9.25	0.96	1.44
16.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자/부자에 대해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9.25	2.87	1.19
38. 경찰서, 소방서 같은 치안 안전시설을 지금보다 훨씬 늘린다.	9.00	0.82	1.24
24. 이념이나 입장이 다른 정치 집단 사이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9.00	0.82	1.24

라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의 느낌이고, 정치적인 관심이 엄청 높은 인터넷 페인 같다. 진중권, 미네르바, 신혜철 같은 인물이 연상되고, 한나라당 지지 집단이 보는 노무현, 김근태, 이해찬 이미지이다.

#### 5 유형: 공약 사회

5유형의 이미지는 각론은 많은데 총론이 없는 것 같다. 각종 정책들만 존재하는데, 이 역시 모범답안 같은 수준이다. 이는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는 사고를 반영하고, 실제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말은 없기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실용적, 탈이념적 사회의 모습이나, 어찌 보면 가치나 정체성이 없는 세트장(가건물) 이미지로 보이기도 한다.

고민은 좀 했으나 현실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고,

정치보다는 시사에 관심이 많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품이 나아 하고, 강하고 쎈 것을 선호하는데, 2002년의 월드컵 거리응원이나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조문에 참여하는 것을 애국이나 국민의 도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박근혜 미니홈피에 일촌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혀 정치적,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개혁보다는 개선을 추구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 미디어에 민감하고, 브랜드를 지향한다. 오세훈, 정운찬, 반기문 같은 정치인을 지지할 것 같다.

#### 6 유형: 이념 사회

6유형은 극단적으로 이념을 중요시한다. 자기 확산

표 10. 6유형에 해당하는 대표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전형성점수

대표문항	평균	표준 편차	전형성 점수
64.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이 방송 발전을 위해 좋다.	2.75	2.06	-2.69
36. 용산 참사나 재개발 문제의 희생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3.50	1.73	-2.28
19.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똑같은 만큼 응징한다.	3.75	1.71	-1.87
58. 홍수 피해 방지와 수자원 개발을 위해, "4대강 살리기"는 잘하는 일이다.	3.75	2.36	-2.06
요인 하위 3 문항 71.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	4.00	1.83	-1.87
73. 파업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과 기업의 계약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4.25	2.22	-1.59
13.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 한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4.50	2.65	-1.65
86.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인생 성공의 기본이다.	4.50	2.08	-1.41
76.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다.	4.75	2.22	-1.29
67. 미국은 영원한 혈맹이기에, 한미 우방 관계를 더욱 중시한다.	5.00	1.83	-1.35

	집단 1	집단 2	집단 3
이미지 유형	공공 사회	공정 사회	공약 사회
	↑공적 작동 시스템 ↓사적 작동	↑공정 규범 현실 인식 ↓평등 심리	↑외적 정책 판단기준 ↓내적 신념
이미지 유형	사적 사회	안티 사회	이념 사회

그림 2. 정치 인식 6개 유형에 대한 요약

과 고집이 매우 강하기에, 상호 토론을 하기가 어렵다. 공(국가)을 사(개인)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실은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믿음이 강하다.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안보 강조, 전통 한미 우호공약과 관계를 중시한다. 5유형의 사회가 시사(時事)를 강조한다면 여기는 시국(時局)이 중요하다. 크고 쉘 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원한다.

세력 구도가 고정되어 있고, 그 속에서 튀지 않으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고, 유교적 사고방식인데, 규범적이고 경직된 인상이 강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발언이 혼신나 계몽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변함없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15%의 50~60대 남성 이미지이며, 이 사람들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 정책에 대해서 겁쟁이 또는 배신자라고 욕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파 집회를 주도하던 아스팔트 우파 느낌이다.

이상 6개 유형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 1은 공공 사회와 사적 사회의 대칭이며, 이들은 사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공공 사회는 공적으로 작동되고, 사적 사회는 개인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집단 2는 공정 사회와 안티 사회의 대칭인데, 이들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공정 사회 집단은 현실은 규범과 질서에 따라 공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안티 사회 집단은 우리 모두는 평등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다. 마지막 집단 3은 공약 사회와 이념 사회의 대칭인데, 공약 사회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정책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념 사회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내적인 신념이 무엇인지에 주목한다.

이 때, 상하 대칭의 의미는 하위 모습이 강조될수록 더욱 더 상위 모습을 지향하게 되는 관계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사적 사회라고 인식할수록 공공 사회를 더욱 이상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며, 현재를 안티 사회로 볼수록 공정 사회, 이념 사회라고 여길수록 공약 사회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해석하면, 공공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싫어하는 사회의 모습은 사적 사회이며, 공정 사회 집단은 안티 사회를 매우 혐오하는 경향을 띤다. 공약 사회 사람들은 이념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를 상당히 불편해한다.

## 연구 2: 정치 인식 유형의 확인

### 연구방법

#### 측정 도구

연구 1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유형을 6개로 구분하고 각 심리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도출된 유형을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재확인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과 타당도를 높이고자 실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Q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각 유형별 10개 대표문항들에 대해 응답자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묻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전체 6개 유형에 해당하는 60개 문항(실제로는 중복 문항으로 인해 문항 숫자가 줄어듦)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위 유형의 문항들이 '사회적 바람직성'<sup>2)</sup>

표 11. 3개 유형을 구분하는 22개 문항과 그 가중치 (문항번호는 86개 설문지 기준)

	공공	공정	공약
05.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린다.	2.0	1.1	
11. 공적인 일처리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1.9	1.2	
12.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1.7	
16.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자/부자에 대해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1.8	1.1
18.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괜찮은 정당이 새로 생기면 지지할 용의가 있다.			2.0
22.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1.1		
23. 공무원 비리는 민간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	1.2	1.6	
24. 이념이나 입장이 다른 정치 집단 사이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1.3
25. 사형제를 유지해서 흉악범은 분명히 처벌한다.		1.5	
26.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여 정치가 제대로 된다.	1.8		1.6
29. 당의 입장이나 결정과 다르더라도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힌다.	1.5	1.3	
33.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있다.	1.3		
38. 경찰서, 소방서 같은 치안 안전시설을 지금보다 훨씬 늘린다.			1.2
41.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하기로 한 일은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1.6	1.4	
43. 독도 분쟁이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게 보다 강력하게 대처한다.			1.4
48.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슈퍼마켓 진출을 규제한다.			1.7
54. 성매매 방지법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단속하고 시행한다.			1.5
65. 중소기업을 살려야 경제 발전 효과가 있다.			1.9
68. 공무원도 정년보장 없이 해고할 수 있다.		1.9	
71.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	1.7		
74. 법원, 검찰 등 사법부가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1.4	2.0	
75.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홍보를 강화한다.			1.8

차원에서 반응 편파가 생길 것이 분명해 보일 경우, 상위 3개 유형에 해당하는 30개 문항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황상민, 유상원, 김지연, 김리진, 2006; 황상민, 김도환, 2006). 하지만 상위 문항만으로 구분된 집단은 실제로 그 집단이 가진 2가지 측면(상위, 하위 모습)을 모두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방식을 택하였다.

연구 1을 통해 사람들의 정치 인식 유형을 나누는 핵심적인 22개 문항(표 15)이 도출되었다. 이는 상위 3

개 유형을 대표하는 30개 문항 중에서 중복된 것을 뺀 것이다. 이 22개 문항을 측정하여, 정치 인식 유형을 구분하는데 사용하였다.

### 조사 대상

연구 1의 유형 구분이 실제 한국 사람들에게서 어떤 분포와 특징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관은 패널인사이드라는 인터넷 여론조사 회사였으며, 실시 기간은 2009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이었다.

### 측정 방식

응답 방식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각 응답자에게 정치 인식 유형을 나누는 22개 문항을 응답자에

2)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하위 유형에 속하는 “대기업은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유력 방송이나 신문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만들어진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법을 안 지킨다”,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다”, “영남, 호남 등 지역 중심의 정치 구도가 여전히 유지된다” 등의 문항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게 무선적으로 제시하고, (앞서 Q 분류의 지시문과 동일하게) 본인이 가장 동의하는 3개, 그 다음으로 동의하는 5개, 그 다음 7개의 순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3개, 5개, 7개에 선택된 문항은 각각 5점, 4점, 3점을 할당하고, 선택되지 않은 7개 문항은 0점 처리하였다.

앞서 각 유형을 대표하는 10개 문항은 산술 평균과 전형성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었기에, 해당 유형에 첫 번째로 높은 대표 문항에 2.0점, 열 번째로 높은 문항에 1.1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반응에 가중치를 곱하고 나면, 개별 응답자는 공공사회 성향, 긍정사회 성향, 공약사회 성향의 3개

점수(각각 만점 50점)를 가지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에 개인의 정치 인식 유형이 할당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연구 결과

###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녀 동수였고, 연령은 30대가 전체의 29.4%로 가장 많았고, 월 소득은 300만원대(23.4%), 직업은 사무직(38.0%), 학력은 대졸(47.4)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빈도	퍼센트 (%)
성별	남자	250	50.0
	여자	250	50.0
연령대	20~29세	121	24.2
	30~39세	147	29.4
	40~49세	139	27.8
	50세 이상	93	18.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60	12.0
	200~300만원 미만	95	19.0
	300~400만원 미만	117	23.4
	400~500만원 미만	92	18.4
	500~700만원 미만	75	15.0
	700~1000만원 미만	32	6.4
	1000만원 이상	19	3.8
	모름	10	2.0
직업	사무직	190	38.0
	전업 주부	88	17.6
	학생	59	11.8
	자영업	48	9.6
	전문직	23	4.6
	기술직	21	4.2
	기타	71	14.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0.6
	고등학교 졸업	83	16.6
	대학교/대학원 재학	69	13.8
	2~3년제 대학교 졸업	64	12.8
	4년제 대학교 졸업	237	47.4
	대학원 졸업	44	8.8

표 13. 조사대상자의 정치적 성향

		빈도	퍼센트 (%)
국정 지지	매우 잘하고 있다	15	3.0
	잘 하는 편이다	114	22.8
	잘 못하는 편이다	215	43.0
	매우 잘 못한다	156	31.2
지지 정당	한나라당	92	18.4
	민주당	64	12.8
	자유선진당	3	0.6
	창조한국당	7	1.4
	민주노동당	29	5.8
	진보신당	16	3.2
	지지 정당 없음	289	57.8
이념 성향	진보	116	23.2
	중도	315	63.0
	보수	69	13.8
역대 최고 대통령	박정희	208	41.6
	노무현	138	27.6
	김대중	110	22.0
	이승만	10	2.0
	기타	34	6.8

정치적 성향을 보면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는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는 편이다’를 합해서 25.8%였고, 전체의 57.8%가 현재 지지하는 정당

이 없다고 응답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이념 성향은 중도 63.0%, 진보 23.2%, 보수 13.8% 순이었다.

역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였는

표 14. 조사대상자의 투표 성향

		빈도	퍼센트 (%)
2007년 대선 투표	정동영	74	14.8
	이명박	165	33.0
	권영길	19	3.8
	문국현	75	15.0
	이회창	46	9.2
	기타	3	0.6
	투표하지 않았다	118	23.6
2002년 대선 투표	이회창	117	23.4
	노무현	235	47.0
	권영길	14	2.8
	기타	5	1.0
	투표하지 않았다	129	25.8
2010년 투표 의사	반드시 할 예정이다	202	40.4
	아마도 할 것이다	202	40.4
	아마도 안할 것이다	76	15.2
	안 할 생각이다	20	4.0

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41.6%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임기 내내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6%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2.0%였다.

조사대상자의 투표 성향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33.0%, 정동영 14.8%로 실제 득표 결과(이명박 48.7%, 정동영 26.2%, 이회창 15.1%, 문국현 5.8%, 권영길 3.0%)보다 낮은데, 이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3.6%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의 투표율이 63%라는 점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이명박 후보는 유권자의 약 30%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또한 문국현의 득표율이 실제보다 높고 이회창의 득표율이 실제보다 낮은 것은 이번 조사가 온라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패널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47.0%, 이회창 23.4%의 순이었고, 2010년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투표 의

사는 전체의 80.8%(반드시 할 예정이라는 40.0%와 아마도 할 것이라는 40.0%의 합)가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 3개 집단의 분포 및 특성

22개 문항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3개 집단을 구분한 결과, 전체의 49.8%가 공공 사회, 34.4%가 공정 사회, 15.8%가 공약 사회 집단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6에서 보듯이, 각 집단별 연령 차이는  $\alpha=.001$  유의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정 사회나 공약 사회 집단에 비해, 공공 사회 집단의 연령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표 18에서 보듯이, 3개 집단과 성별 사이에 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chi^2_{df=2} = 3.798, p > .05$ ).

앞서 연구 2의 측정 방식에서 설명했듯이, 각 개인은 공공, 공정, 공약 사회에 해당하는 3개 점수를 가지

표 15. 이상 사회에 대한 3개 집단의 분포

	빈도	퍼센트 (%)
공공 사회	249	49.8
공정 사회	172	34.4
공약 사회	79	15.8
전체	500	100.0

표 16. 3개 집단의 연령 차이

	공공 사회	공정 사회	공약 사회	전체
평균	36.23	39.97	39.94	38.10
표준편차	10.06	10.08	10.13	10.23

표 17. 3개 집단의 연령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집단간	1736.574	2	868.287	8.551	.000
집단내	50468.426	497	101.546		
전체	52205.000	499			

표 18. 3개 집단과 성별과의 비교 (괄호 안은 퍼센트)

	공공 사회	공정 사회	공약 사회	전체
남자	115 (46.0)	89 (35.6)	46 (18.4)	250 (100.0)
여자	134 (53.6)	83 (33.2)	33 (13.2)	250 (100.0)
전체	249 (49.8)	172 (34.4)	79 (15.8)	500 (100.0)

표 19. 3개 집단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

	공공 사회	공정 사회	공약 사회
공공 사회	1.000		
공정 사회	.127**	1.000	
공약 사회	-.552***	-.714***	1.000

\*\*  $p < .01$  \*\*\*  $p < .001$

표 24. 이념 성향에 따른 국정 지지에서의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진보	116	3.29	0.81	28.473	.000
중도	315	3.06	0.73		
보수	69	2.42	0.88		
Total	500	3.02	0.81		

게 되고, 그 중에서 최대값에 개인 유형이 할당되는데, 3개 집단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 집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공공, 공정, 공약 사이의 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공약 사회와 다른 2개 집단 사이

에는 강한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공약 사회 성향이 높을수록 다른 2개 성향 점수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 3개 집단의 정치 성향의 차이

3개 집단의 정치적 성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표 20. 3개 집단과 이념 성향의 비교 (괄호 안은 퍼센트)

	공공 사회	공정 사회	공약 사회	전체
진보	71 (61.2)	33 (28.4)	12 (10.3)	116 (100.0)
중도	154 (48.9)	107 (34.0)	54 (17.1)	315 (100.0)
보수	24 (34.8)	32 (46.4)	13 (18.8)	69 (100.0)
전체	249 (49.8)	172 (34.4)	79 (15.8)	500 (100.0)

표 21. 3개 집단과 지지 정당의 비교 (괄호 안은 퍼센트)

	공공 사회	공정 사회	공약 사회	전체
한나라당	26 (28.3)	51 (55.4)	15 (16.3)	92 (100.0)
민주당	31 (48.4)	21 (32.8)	12 (18.8)	64 (100.0)
지지정당 없음	157 (54.3)	89 (30.8)	43 (14.9)	289 (100.0)
전체	214 (48.1)	161 (36.2)	70 (15.7)	445 (100.0)

표 22. 3개 집단과 역대 최고 대통령 평가의 비교 (괄호 안은 퍼센트)

	공공 사회	공정 사회	공약 사회	전체
박정희	82 (39.4)	90 (43.3)	36 (17.3)	208 (100.0)
김대중	66 (60.0)	27 (24.5)	17 (15.5)	110 (100.0)
노무현	85 (61.6)	38 (27.5)	15 (10.9)	138 (100.0)
전체	233 (51.1)	155 (34.0)	68 (14.9)	456 (100.0)

표 23. 3개 집단에 따른 국정 지지에서의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공공사회	249	3.20	0.72	12.173	.000
공정사회	172	2.82	0.90		
공약사회	79	2.92	0.78		
전체	500	3.02	0.81		

이념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3개 집단과 이념 성향 사이의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alpha=.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chi^2_{df=4} = 13.245, p < .05$ ). 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공공 사회 집단에 좀 더 많았고, 이에 비해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정 사회 집단에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10% 이상의 지지도를 가지는 3개 정당 범주에 대해 비교하였는데, 3개 집단과 지지 정당 사이의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alpha=.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chi^2_{df=4} = 22.327, p < .001$ ).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공 사회는 상대적으로 적게, 공정 사회는 많게 나타났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10% 이상의 선호도를 가지는 역대 대통령에 대해 비교해 보았는데, 3개 집단과 역대 최고 대통령 평가에 대한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alpha=.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chi^2_{df=4} = 22.411, p < .001$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공공 사회는 더 적게, 공정 사회는 더 많이 나타났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공공 사회에 더 많게, 공정 사회에 더 적게 나타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공약 사회의 빈도도 낮게 나타났다.

### 국정 지지에 대한 3개 집단간 차이

이상의 과정을 통해, 3개 집단이 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나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집단간 차이를 변량분석하였다.

이 때 종속 변수는 ‘매우 지지’ 1점에서 ‘매우 반대’ 4점의 연속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간

국정 지지에 대한 차이는  $\alpha=.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특히 공공 사회 집단이 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3개 집단 변량에 의한 국정 지지 설명력( $\eta^2$ )은 .047로 그리 크지 않았다.

더불어, 개인의 이념 성향에 따른 국정 지지에서의 차이도 검증했는데,  $\alpha=.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 $\eta^2$ )은 .103이었다.

## 논의 및 제언

### 결과에 대한 논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정치적 인식 반응을 구분한 결과, 서로 다른 3개 집단과 6개 유형(공공 사회, 사적 사회, 공정 사회, 안티 사회, 공약 사회, 이념 사회)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위 3개 유형은 심리적으로 각기 하위 3개 유형과 맞물려 있다. 공공 사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은 사적 사회를 가장 싫어하는데, 사실 현재 한국 사회를 사적 사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정 사회를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은 안티 사회를 가장 싫어하고, 공약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혐오한다.

3개 집단은 각종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정치적 성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개 집단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공공 사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맞물려 역대 최고의 대통령을 누구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국정 지지도의 30% 이상이 설명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선호하는 집단에게서 국정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일반

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정권 교체 직후 정권에서만 나타나는 대비 효과 때문인지는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 3개 정치 인식 유형은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3개 정치 인식 유형은 실제 정치인들의 각종 발언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의 특정 발언은 그가 현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사회를 이상적으로 지향하고 있는지를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는 것 같다 (2008년 1월 14일, 대운하 관련, 이명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구태 야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부 부정하고 반대하면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옳은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시시비비(是是非非)’의 태도를 가져야지, 무조건 ‘비비비비(非非非非)’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2009년 11월 24일,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중앙일보 인터뷰)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반대만 하는 야당, 또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야당에 굴복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2009년 10월 26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 관련)

이러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현재 한국 사회를 안티 사회로 바라보고 있다. 낱말의 단어들은 앞서 연구 1의 안티 사회 유형 설명에서 언급된 것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는 공정 사회의 모습이 된다. 하지만 이들이 그러한 규칙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2009년 11월 10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참여당에 참여하는 선언문에서 사용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라는 언급은 그가 현재 한국 사회를 사적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가 지향하는 사회는 복유형 공공 사회의 모습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2004

년 5월 27일 연세대학교 리더십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신뢰가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냐, 신뢰가 먼저입니다”라고 정치인의 신뢰를 강조한 심리적 배경은 그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공공 사회임을 보여준다.

또한 2008년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된 홍정욱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은 이념과 실용의 대결에서 실용을 선택했으며, 반-한나라당 정서를 부각시키는 명분의 정치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근거하고 있는 정치관을 반영한다. 그는 2009년 9월 25일 어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단기목표는 공약 100% 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념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 사회 대신 실용과 공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 공정 사회의 심리적인 대비는 불공정이 아니라, 안티 사회이다

Q 방법론을 활용한 상호주관성 연구방법론에서 Q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부딪치는 어려움은 각 유형에 대해 이름 짓고, 그 명칭들 사이의 수준을 맞추고, 유형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다.

공공 사회 대 사적 사회로 대비되는 첫 번째 집단은 사회과학적 정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수준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공정 사회 대 안티 사회의 대비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사회과학 용어를 염두에 두면, 공정 사회의 대비는 불공정 사회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러한 대비보다는 공정 대 안티의 구도를 사용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정의 반대말은 불공정이 아니라 안티를 거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뜻이다. 달리 표현하면, 공정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일수록 따지를 매우 싫어한다는 것이고, 현실 사회를 안티 사회로 인식할수록 공정한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보자면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개념이나,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적 절약’ 혹은 ‘프레임’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약 사회 대 이념 사회의 대비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념의 반대말은 탈-이념 혹은 실용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선거 당시의 공약과 같은 수준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공약’이라는

명칭 대신에 ‘실용’도 검토해 보았으나, 실용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심리적인 접근의 유용성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아무튼 이데올로기나 이념적 편향을 싫어하거나 경계하는 사람들일수록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이 공약을 다 지킨다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감동을 주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범답안 같은 느낌에 그치기 때문이다.

### 중도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이 아니다

정치 인식에 관한 3개 집단은 흔히 말하는 진보, 보수, 중도와 의미상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어찌 보면 2009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보, 보수, 중도의 각 집단이 원하고 있는 심리적 내용이 3개 집단의 속성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공정의 반대말이 불공정보다는 안티로 인식되는 것처럼, 현재 한국 사람들에게 진보=공공, 보수=공정, 중도=공약의 모습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나타내는 심리학적 차별점이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사회과학적 의미에서의 진보 대 보수라는 구도는 어떤 사회의 양상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진보와 보수가 심리적으로 구체화되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일상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일차원 배열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중도’라고 생각하지만, 3개 정치 인식 성향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약 사회의 성향이 다른 2개 성향과 강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위 중도 집단이 진보와 보수의 중간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중도 집단을 만족시킬 경우, 진보나 보수 양쪽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공공 사회의 결핍들은 정치가 바뀌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3개 유형 중에서 공약 사회 집단은 분포 비율상 가장 적을뿐더러 탈-이념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한국 정치의 변화는 결국 공공 사회와 공정 사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공공 사회 집단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없기에, 공공 사회를 한국 사회의 비전으로 제시하려는 정치 집단의 경우, 유권자가 가진 이 마음의 틀을 먼저 변화시키지 않는 한 어떠한 시도나 제안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조직된 힘’ 이전에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지 못한다면 말이다. 이는 공공 사회 집단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 문항은 2가지로 해석가능한데, 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공공 사회의 전제 조건일 수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사회적 변화보다는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공공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 집단이 유권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변화 의지를 촉진시키는데 실패한다면, 현실적으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사회상은 공정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또한 공정 사회의 경우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72%의 설명력에서 나타났듯이, 기대하는 정치사회적 모습이 상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것은 유형들 사이의 동상이몽 때문이다

3개 정치 인식 유형이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한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 양상을 설명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먼저 각종 갈등이 격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일한 현상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현상에 대해 한 집단은 그것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유발된 것이기에 반대하지만, 다른 집단은 그러한 반대를 단지 반대를 위한 반지라고 생각한다. 이들과 또다른 집단은 이들의 갈등을 현실이 아닌 이념의 문제로 해석하기에 더욱 외적인 측면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예를 들어, 용산 철거 사태에 대해서, 공공 사회 집

단은 그 사건은 정부, 서울시, 개발업체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난한 철거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을 요구하지만, 공정 사회 집단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된 것이기에 이러한 반대 의견을 짜증스럽게 바라본다. 공약 사회 집단은 이러한 갈등을 좌파와 우파의 구시대적 대립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디어법 파동의 경우에도 공공 사회 집단은 대기업과 일부 언론의 개인적 음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정 사회 집단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한다. 공약 사회 집단에겐 미디어법 문제는 심리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

####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현실적인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본 연구를 통해 정치 인식에 관한 6개 유형, 3개 집단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그러한 개념적 구분과 마음의 지도가 보다 실제적인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 장면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향후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유형별 투표 행동의 차이를 추적 조사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의 패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후속 측정을 통해, 유형의 전체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각 개인 유형의 일관성은 어느 정도인지, 유형별 투표에서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공, 공정, 공약이라는 마음의 지도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다 면밀히 탐색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심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먼저 공공, 공정, 공약 집단으로 구분한 유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의 문제이다. 즉 3개 성향이 모두 유사하거나, 특정 2개 성향이 유사할 경우를 고려하면 유권자는 심리적으로 훨씬 더 세분화될 수도 있다. 일단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3개 집단으로 분석하였으나, 이에 추가적인 구분도 가능할 것이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각종 시나리오 작업 역시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형 검증의 맥락보다는 관계의 양상을 탐색하는데 우선적 목적이 있었기에, 다양한 변인들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정치 인식 유형과 속성들 사이의 종합 모형을 구축하는 작업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권혁남(2002).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갑식(2007). 한국의 남남 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23 (2), 31~59.
- 김기정(2006). 폭력의 그늘 무엇이 남는가. 서울신문, 2006년 3월 18일자.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27~333.
- 김의철(2002). 한국의 민주주의, 리더십과 정치문화: 정치효능감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37~170.
- 김정운, 한성열(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김홍규(2003). Q 방법론의 정치학적 적실성과 적용 가능성. 주관성 연구, 8, 5~19.
- 나은영, 한규석, 고재홍(2003).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의 효과와 제3자 효과: 세 지역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45~158.
- 노병만(1998).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형성과 그 원인분석: 지역감정, 지역갈등 개념을 대신하여. 한국정치학회보, 32, 59~86.
- 백상건(1992). 정치학 강의. 서울: 박영사.
- 삼성경제연구소(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 CEO Information, 제710호.
- 서문기(2001). 한국 사회의 정부 신뢰 구조. *한국사회학*, 35(5), 119~146.
- 서문기(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 송호근(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 송호근(2006).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 안순철(2001). 한국 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예측 공간 분석: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3), 153~171.
- 안신호(2000).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경향성과의 관계 및 기저 동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45~180.
- 이병량, 김서용, 전영평(2008). 한국 사회갈등 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49~72.
- 이상신(2009). 정치심리학의 연구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51.
- 이정희(2005). 마음의 정치: 현대 정치심리학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한겨레 21(2008). 무당파 50% 넘었다. 2008년 12월 12일자.
- 황상민(2005).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김영사.
- 황상민, 김도환(2003a).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 분석에 나타난 세대와 라이프스타일의 심리: 심리학 연구의 사회적 응용을 위한 또다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87~199.
- 황상민, 김도환(2003b). 발달심리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과학철학적 탐색: 발달현상의 연구와 발달적 맥락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1), 1~17.
- 황상민·김도환(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황상민, 김도환(2006). 한국 사회에서 리더십 이미지와 한국인의 마음의 지도. *주관성연구*, 12, 2~13. 한국주관성연구학회.
- 황상민, 유상원, 김지연, 김리진(2006). 소비 행동으로 구분되는 한국 사회의 소비자 유형과 소비문화적 특성: 누가 무엇을 위해 소비하는가?. *주관성연구*, 13, 25~39. 한국주관성연구학회.
- Caprara, G. V. & Zimbardo, P. G. (2004). Personalizing politics: A congruency model of political pre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59(7), 581-594.
- Fabes, R. A., Martin, C. L., Hanish, L. D., & Updegraff, K. A. (2000). Criteria for evaluating the significance of developmental research in the 21 century: Force and counterforce. *Child Development*, 71(1), 212~221.
- Farr, R. M. & Moscovici, S. (1984).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son, J. 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Gjerde, P. F. (2001). *A study of developmental types from preschool in young adulthood*. Presented "Lives through time in cultural context" Institute for Human Behavior of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elgesen, G., 김효창, 김의철 (1995). 한국 정치 문화의 변화와 연속성. *한국심리학회 1995년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51~564.
- Hinich, M. J. & Munger, M. C. (1994). *Ideology and the theory of political choic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Frank J.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39~375.
- Kinder, D. R. & Sears, D. O. (1985).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action. In G. Lin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2, 659~741). Reading, MA:

- Addison-Wesley.
- Kuklinski, J. H., Luskin, R. C., & Bolland, J. (1991). Where is the schema? going beyond the "s" word in political psycholog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1342~1356.
- Moscovici, S. (2000). *Social representations: Explorations in social psychology*, Polity Press.
- Mueller, D. (1997). *Perspectives on public choice: A handboo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verton, W. F. (1998). Developmental psychology: Philosophy, concepts, and methodology.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5th ed., pp. 107~188).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ye, L. W. (1991). *China: an introduction*. Harper Collins Publishers.
-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etlock, P. E. (1984). Cognitive style and political belief system in the British House of Comm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2), 365~375.
- Verba, S., Schlozman, K. L., &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esten, D. (2007). *The political brain: The role of emotion in deciding the fate of the nation*. Public Affairs.

## The Psychological Representation Types of Political Phenomenon in Korea

Dowhan Kim Sang Min Whang Yoon-shik Choi  
Chung-Ang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attempts to describe Korean people's psychological mindsets concerning diverse political issues and explore the effect of these mindsets on people's political stances and behaviors. In study 1, 86 statements that reflected diverse political issues and stances were extracted and Q methodology was utilized for this exploratory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three prevalent mindsets in Korea. These types of mindsets include: public society versus private society (Group 1), justice society versus opposition society (Group 2) and pledge society versus ideology society (Group 3). In Study 2, a survey was distributed to 500 participants to further explore this issue based on the results found in Study 1. The results indicated that 49.8% of the population was in Group 1, 34.4% in Group 2 and 15.8% in Group 3. In addition, these three groups differed significantly in their ideologies, political party that they associate with, voting tendencies, and evaluations of past and current presidents. The findings revealed how psychological mindsets of political awareness affect behaviors of the people in Korea and suggested a comprehensive map of people's stances on political issues in Korea.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s political viewpoints not in terms of a conservative-liberal dichotomy, but more as a psychological phenomenon.

*Keywords:* Political psychology, political behaviors, subjectivity

1차원고 접수일 : 2010년 07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5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5월 26일